

‘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검토...의사들 거센 반발

이달말 의료개혁안 발표...“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 거쳐야”
‘의료사고 땀 의료진 설명’ 법제화 추진...의사들 “의료체계 대혼란”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할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 (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할을 담보하는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 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진료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 면허’ (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면허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었다.

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의사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강습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학교교육평가원 등에서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로 인력 수급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가 진료면허 도입 카드를 꺼내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인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면허)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천명을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소위 통과
광주·전남 3년 간 피해자 637명

전국적으로 2만명에 이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료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3년 간 경찰이 파악한 광주·전남 피해자는 6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는 213명, 전남에서는 424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누리 상품권 5.5조 발행...사용처도 대폭 확대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이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자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증원

소상공인들 지원 자금 5천억 신설

최근 반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 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

면 도입,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장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외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상담문의 · 010-6648-0725